

2022년 인천테크노파크 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 인천광역시에서는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2022. 2. 7.부터 2022. 2. 18. 까지 10일간 1개반 8명이 참여하여 2019년 1월부터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인천테크노파크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총 33건(본처분 31건, 현지처분 2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등 처분요구를 하였으며,
- 감사기간 중 발굴한 수범사례 5건은 대 내·외 공개함으로써 산하 전 기관의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 감사결과

구 분	계 (건/명)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건/천원)			신분상 조치(건/명)		
		소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소계	추징 환수	환급 감액	소계	경징계	훈계
계(건/명)	33/24	33	5	19	9	2/17,225	2/17,225	-	6/24	-	6/24
본 처 분	31/24	31	5	17	9	2/17,225	2/17,225	-	6/24	-	6/24
현지조치	2/-	2	-	2	-	-	-	-	-	-	-

2022년 인천테크노파크 종합감사 결과
[지 적 사 항 목 록]

인 천 광 역 시

주의(훈계) 요구

제 목 소속 직원 대외활동 관리 소홀

기 관 명 (재)인천테크노파크

관 계 부 서 ◇◇◇◇본부(○○○○팀, △△△△팀), ◆◆◆◆본부(□□□□센터, ○○○○○○○센터), ◆◆◆◆본부(€ € € € 센터, ∞ ∞ ∞ ∞ 센터, ∞ ∞ ∞ ∞ 센터), ▽ ▽ ▽ ▽ ▽ 본부(ⅩⅩⅩⅩⅩⅩ센터)

내 용

(재)인천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에서는 [표 1]과 같이 2019년~2021년 기간 동안 「대외활동규정」 및 「인천테크노파크 임직원 행동강령 규칙」에 따라 대외활동을 수행 하였다.

【표 1】 소속 직원 대외활동 현황

(단위: 명, 회)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현 원	228 (88)	270 (89)	301 (101)	() 기간제 근로자
대외활동인원	71	91	86	
횟 수	455	567	703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대외활동규정 준수 소홀

테크노파크 「대외활동규정」 제2장(정의)에 따른 ‘대외활동’이라 함은 1.겸임교원활동, 2.출강, 3.협·단체 참여, 4.자문 및 심의 참여활동, 5.외부용역 수탁·수행, 6.기타 회의 참여 등으로 같은 규정 제3조(승인의 범위 등)제1항에 따르면 직원의 겸직 및 대외활동은 대외활동으로 인해 본연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경우, 법인 업무수행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해당하

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직원의 대외활동 시간한도 등 세부 허가기준을 [표2]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2】외부강의 허가기준

구분	허가기준
겸임교원·출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시간 외 활동을 원칙으로 함 · 주 2일 6시간 이내 · 겸직관련 겸임·출강활동의 경우, 연간 140시간 이내 · 기타 출강의 경우, 연간 40시간 이내 · 1년 단위로 허가하되, 추가 1년 이내 연장가능 (단, 연속 최대 2년 이내로 제한)
협·단체 참여, 자문 및 심의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적수 연간 20회 이내
기타 (학회 및 학술단체임원 또는 비영리법인 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무보수 비상근(영리목적불허) 단, 관계부처 장관 승인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수를 제한적으로 인정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기관 요청공문에 근거하여 허가 ·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 수수 금지

◆ 참조: 「대외활동규정」〈별표 2〉

그런데도 테크노파크는 직원의 외부활동 중 협·단체 참여, 자문 및 심의활동에 있어 대외활동으로 인한 본연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누적 수 연간 20회 이내로 제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2021년 기간 동안 총 5명 23회에 걸쳐 연간 20회를 초과하는 외부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있다.

2. 임직원 행동강령 규칙 관련

건전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공무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

강의 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규정 운영지침 제17조(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따라 월 3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검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인천테크노파크 임직원 행동강령」 제24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제7항에 따르면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을 경유하여 차상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검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테크노파크에서는 2019년~2021년 기간 동안 총 5명의 직원들이 외부강의 등을 수행하면서 [표3] 와 같이 그 횟수가 월 3회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을 경유하지 않고 총 5명의 직원이 13회 외부강의 등 활동을 수행하는 「인천테크노파크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표3】 소속 직원 외부강의등 월 3회 초과활동 내역[세부내역 : 붙임1]

(단위:명, 회)

구분	2020년			2021년			
	5월	8월	9월	5월	10월	11월	12월
대상자	1	2	1	1	1	1	1
외부강의등 횟수	4	11	4	6	4	4	4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3. 대외활동 관련 복무처리 미흡

테크노파크 「대외활동규정」 제6조(대외활동 직원에 대한 복무처리)에 따르면 담당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법인의 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여비 등 출장비를 포함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출장비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테크노파크는 2021.7.1.~2022.1.31. 기간 동안¹⁾ 담당직무 수행 및

1) 2019.1.1.~ 2021.6.30. 인천테크노파크 자체 복무감사완료

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대외활동을 수행하면서총 3명의 직원이 7회에 걸쳐 출
장 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은

[주의] 테크노파크는 대외활동 연간 횟수를 초과하고, 복무처리를 하지 않고
대외활동을 수행하며, 행동강령관 경유 없이 외부강의 등 활동을 수행한
아래의 관련자를 훈계·주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훈계〉

(재)인천테크노파크(OOOOOO팀)



(재)인천테크노파크(QQQQQQ센터)



(재)인천테크노파크(\$\$\$\$\$\$센터)



(재)인천테크노파크(&&&&&본부)



〈주의〉

(재)인천테크노파크(#####센터)



(재)인천테크노파크(%%%%%%%%%센터)



(재)인천테크노파크(@@@@@@센터)



(재)인천테크노파크(SSSSS센터)



(재)인천테크노파크(UUUUUU센터)



인 천 광 역 시

시정·개선 요구

제 목 소속 직원 건강검진 관련

기 관 명 (재)인천테크노파크

관 계 부 서 ☞☞☞☞본부(▲▲▲▲팀)

내 용

1. 개인 건강검진의 공가 사용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재)인천테크노파크는(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 직원들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인사관리규정」 제42조(공가)에 따라 공가로 규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에 따른 건강검진일 경우에 한하여 그 사용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건강검진)에 따른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테크노파크에서 개인적으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연가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공가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연차수당을 과다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2. 건강검진 비용지원 과다

테크노파크 「보수관리규정」 제31조(건강진단)에 따르면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19년~2021년 기간 동안 매년 소속 직원 전원에게 1인당 300천원의 비용을 매년 [표1]와 같이 지원하였다.

【표1】 임직원 건강검진비용 지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지원계획 인원	226	271	308	
검진완료 인원	196	223	272	
의무검진 대상	127	125	163	
과다지원 인원	69	98	109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022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III.주요예산편성기준 2.경비 (2) 복리후생비에 따르면 복리후생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수준의 복리후생비를 편성하지 않도록 하며, 사회통념상 허용 여부는 일차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을 기준으로 하며, 참고로 인천시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속 직원에게 사무직 비사무직에 관계없이 2년에 1회 300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테크노파크에서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규칙」에 따라 기본복지점수를 1,000포인트(1포인트=1,000원)로 하여 변동복지점수를 근속점수와 가족점수, 직급점수 등으로 추가로 부여하고 최대 1,500포인트를 지급하여, 자기계발·건강관리(건강검진 포함)·여가활용(레저·취미)·가정친화 등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테크노파크가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선택적 복지제도를 통하여 선택적으로 건강검진을 따로 받을 수 있도록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으면서 건강검진 의무대상자가 아닌 직원에게도 매년 건강검진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건강검진에 대한 후생복지를 중복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인천시 공무원 복지후생의

수준을 초과하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복지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지원으로 볼 수 있다.

조치할 사항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은

[시정] 초과 지급된 연차수당 173,600원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환수조치 등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소속 직원들에게 지원하는 건강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무건강검진에 한해서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개선·주의 요구

제 목 인사관련 규정 개선

기 관 명 (재)인천테크노파크

관 계 부 서 ☎☎☎☎본부(▲▲▲▲팀)

내 용

(재)인천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에서는 「정관」을 포함하여 79개의 자체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한 임직원의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인사관리규정」 및 「인사관리규칙」을 운영하고 있다.

1. 직원 징계기준 완화 관련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을 참고하여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여야 한다.

가. 징계의 종류와 효력 관련

「지방공무원법」 제70조(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징계의 효력)에 따르면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하고 ②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삭감하며 ③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⑤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또한 같은 법 제31조(결격사유)에 따르면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테크노파크 「인사관리규정」 제61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따른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종류를 정하고 정직은 1월에서 3월 이하의 기간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연봉월액(연봉/12월)의 3분의 2를 감하고,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연봉월액(연봉/12월)의 10분의 1을 감하도록 하여 [표1] 과 같이 징계규칙의 징계기준보다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표1】징계의 종류와 효력 비교 내역

징계 종류	지방공무원법			테크노파크 인사관리규정		
	임용제한	직무제한	보수	임용제한	직무제한	보수
파면	5년간	-	-	5년간	-	-
해임	3년간	-	-	3년간	-	-
강등	-	3개월간	전액삭감	규정에 없음		
정직	-	1월~3월	전액삭감	-	1월~3월	2/3 삭감
감봉	-	1월~3월 (직무중사)	1/3 삭감	-	1월~3월 (직무중사)	1/10삭감 ²⁾
견책	-	-	-	-	-	-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게다가 강등 징계는 「인사관리규정」 제61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서 「인사관리규칙」 〈별표7〉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인천테크노파크 임직원 행동강령 규칙」 〈별표4〉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에서는 강등 징계를 양정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어 규정상의 정비가 필요하다.

2)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나. 징계양정기준 관련

징계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에 따르면 징계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징계기준, <별표1의2>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별표1의3>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1의4>의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별표1의5>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6>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테크노파크는 「인사관리규정」 제62조(징계의 양정기준)에 의한 징계관련 세부기준을 「인사관리규칙」 제53조(징계양정기준)에서 <별표3> 징계양정기준 내지 <별표7> 음주운전 징계기준과 같다고 하고, 별도로 같은 규칙 <별표6>에서 채용비위자 징계 기준을, 「인천테크노파크 임직원 행동강령 규칙」 <별표4>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기간 중 확인한 테크노파크의 <별표3> 징계양정기준은 [붙임1] 과 같이 징계규칙의 ‘징계기준’보다 완화하여 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아울러 성 관련 비위 사건 징계기준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기준이 되는 징계규칙보다 완화되어 운영하고 있는 테크노파크의 징계양정기준에 대해 상위법령보다 완화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2. 징계의 감경관련

테크노파크 「인사관리규칙」 제57조(적용의 특례)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징

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이사장(장관, 시장급 이상 포함)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와 징계대상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고, 이 경우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 감경사유에 해당 된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제1차 인사위원회(2019.2.27.개최)는 인천시 감사결과³⁾에 따른 테크노파크 원장의 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인사관리규칙」 제57조(적용의 특례)제2항에 따른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인정하여 경징계 처분요구를 불문·경고로 감경한 바 있다.

그러나 2019.2.27. 개최한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징계대상자의 비위가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었으므로 법인규정에 의거 견책을 불문에 붙여 감경하여 경고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라고 기록한 것을 근거로 볼 때 감경의 사유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이라고 보기에 부족한 바 징계양정을 합당하고 공정한 사유 없이 감경 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징계규칙 제5조(징계의 감경)제2항에 따르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가 징계를 감경할 수 없음에도, 「인사관리규칙」 제57조(적용의 특례)에서는 금품·향응수수, 공금 유·횡령,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 ⁴⁾채용비리에 따른 징계대상자에 대해서만 감경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2021년도 제10차 인사위원회(2021.8.18.개최) 징계 심의·의결에 따른 징계사유가 업무소홀에 따른 직무태만임에도 감경제외 규정에 없어 엄중하게 다루어 져야할 직무태만에 관한 사항이 감경되어 처분되어진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인천시 감사관-2443(2019.2.14.)호 ‘공공기관 경력 미달자 채용비리의혹(2018청탁 1446호, 1447호) 조사결과 통보’

4)2020.1.21. 「인사관리규칙」 개정에 따른 감경제외

3. 직원 근무평정 시 가·감점 규정 정비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 하고 있다

같은 법 제25조(지도·감독 등) 제2항 에서는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토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지도·감독 등)에 따르면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 등에 관한 사항 및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 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테크노파크에서는 「인사관리규정」 제27조(평가)에 의하여 원장은 직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직원의 승진, 기본연봉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하며, 「인사관리규칙」 제15조(근무성적 평정)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성과평가 평정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테크노파크는 「인사관리규정」 제27조(평가)에 의하여 원장은 직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인사관리에 가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성과평가 평정규칙」〈별표 1〉성과평가 종합평점산출 및 등급부여 요령에 따른 4. 종합평점 산출시 가감점 반영 항목에서는 [표2]와 같이 시장 및 이사장표창에도 가점 1점을 부여하여 [표3]와 같이 2019년~2021년 기간 동안 총 103명이 시장표창에 의한 포상가점을 부여받은 사실이 있다.

【표2】 포상가점 규정 내용

구 분	대통령	국무 총리	장관, 시장 및 이사장
평 점	3점	2점	1점

◆ 참조: 「성과평가 평정규칙」〈별표 1〉

【표3】 시장표창 포상가점 부여 대상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가점 부여자	33	33	37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게다가 「성과평가 평정규칙」 〈별표 1〉 성과평가 종합평점산출 및 등급부여 요령에 따른 4. 종합평점 산출시 가감점 반영 항목에 의한 징계처분 감점에 따르면 [표4] 과 같이 정직, 감봉, 견책에만 감점을 주고 있으며, 「인사관리규칙」 제54조(외부 감사기관의 경미한 처분 요구)에 따른 외부 감사기관 감사 결과에 따른 훈계, 주의 등 경미한 처분에 대하여는 따로 감점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표4】 징계처분 감점 내용

구 분	정직	감봉	견책
평 점	3	2	1

◆ 참조: 「성과평가 평정규칙」〈별표 1〉

「인천광역시 평정업무 처리지침」에서는 근무성적평정 시 총점을 100점으로 하여 평정항목을 근무실적(50점), 직무수행능력(50점)으로 나누고 평정대상기간 중의 감점사유 발생 시 직무수행능력의 ‘성실성’ 항목(8점)에서 [표5] 와 같이 감점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하고 있다.

【표5】 인천시 근무평정 감점항목 및 항목별 배점

감점항목	배점(회당)	감점항목		배점	비고
중징계	3.0	복 무 태 도	무단결근(1일)	0.5	복무태도는 1차 평정자가 판단한 복무태도 감점임. ※복무태도 감점은 총 3점 이내
경징계(감봉)	2.5				
경징계(견책)	2.0				
직위해제	2.0		장기간 무단이석 및 무단외출 (1회당)	0.2	
불문경고	1.0				
업무기피	1.0				
훈계(1회당)	0.5				
추가감점	0.5		지각 및 무단조회 (1회당)	0.1	

따라서 테크노파크는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공직유관단체로, 설립의 목적을 「정관」 제2조(목적)에서 ‘지역경제활성화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공적가치 추구에 있어서 소속 임직원 업무의 성실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무평정 시 인천시 수준의 불문경고, 훈계, 주의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에 대한 감점제도를 규정함이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은

[개선] 징계규칙보다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와 효력, 징계양정기준 및 「성과평가 평정규칙」의 포상가점과 징계처분 감점 규정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참고하여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향후 합당하고 공정한 사유 없이 징계를 감경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훈계) · 개선 요구

제 목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재)인천테크노파크

관 계 부 서 XXXX본부(»»»»센터), ⊕⊕⊕⊕본부(⊙⊙⊙⊙센터)

내 용

(재)인천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모절차를 통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 운영하고 있다.

공모사업은 절차 및 선정방법(평가항목, 평가방법, 선정 기준 등) 등에 대하여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정당한 결재권자에게 결재를 득한 후 공고문을 통하여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1. 「디지털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선정절차 부적정

테크노파크는 인천의 관내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2021 디지털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 2021 디지털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개요

- 신청기간 : 2021. 8. 24. ~ 9. 3. (11일간)
- 지원대상 : 인천시 관내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
- 지원규모 : 48개사 내외
- 선정방법 : 서류평가 100%(인천시 2021 수출지원사업 평가 기준 의거)
- 지원금 지급 : 기업 당 최소 3백만원, 최대 5백만원 지원
- 선정결과 : 신청기업 총 72개사 중 45개사 선정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러나 모집 공고 선정절차에 대해 확인한 결과 모집 공고와 관련 지원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정하였으나,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선정

기준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

또한 공고문(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1-389호)에 선정방법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2021 수출지원사업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선정 기준 및 동점자 발생 시 적용 기준 등은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

‘2021 디지털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마감결과 총 72개사가 신청하였으며, 참여기업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자체 평가하여 총 점수에 따라 고득점 순위로 총 45개사를 선정 통보하였다.

공고문에는 지원 분야에 따라 [표 1] 과 같이 지원금 및 지원규모를 분류하여 명시하였으나, 선정과정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고 공고문과 다르게 최종 선정결과를 처리하여 글로벌 SNS 마케팅 분야는 당초 계획보다 10개사가 감소되었다.

[표 1] 공고문 지원내용 및 선정결과

연번	지원분야	공고문		모집결과	
		지원금	지원규모	신청기업	선정결과
1	글로벌 검색엔진 최적화 서비스	5,000천원	28개사	19개사	11개사
2	글로벌 B2B/B2C 오픈마켓	5,000천원		36개사	24개사
3	글로벌 SNS 마케팅	3,000천원	20개사	17개사	10개사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사업담당자가 자체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신청 대상 중 4개사가 동점 (22점) 처리되었으나, 사업담당자는 사전에 동점자 처리기준에 대한 내부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임의 판단하여 그 중 3개사만 선정 처리하고, 1개사는 동점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준 없이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이후 선순위로 선정된 기업 중 참가포기⁵⁾ 업체가 발생하자, 사업담당자는 후순위 업체를 선정하여 메일로 통보한 사실이 있다.

2.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사업」 관련 공모사업 선정절차 부적정

테크노파크는 인천광역시와 「2019년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유망 로봇기업 지원 등을 통하여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 협약 개요

- 사업명 : 2019년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 협약기간 : 2019.1.1. ~ 2019. 12.31.
- 총사업비 : 300,000,000원(시비)
- 협약당사자 :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원장(現 인천테크노파크원장)
- 사업내용
 - 로봇기업 사업화 지원(100백만원), · 로봇산업 마케팅 지원(80백만원)
 - 어린이 로봇캠프 개최(50백만원) · 청소년 창작 로봇교실 운영(25백만원)
 - 로봇밴 운영(25백만원) · 로봇산업 협력 네트워크 운영(20백만원)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사업 추진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9년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사업」으로 참가 기업 모집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표 1] 과 같이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심사 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공고문에도 공모사업의 심사기준 및 평가방법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5) 참가포기 업체 : (주)쓰리스타 (글로벌 SNS 마케팅 분야), (주)한스코스(글로벌 B2B/B2C 분야)

[표 1] 「2019년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사업」 모집 공고 현황

구분	공고명	절차 적정성		
		내부방침 (평가방법 포함여부)	평가위원 구성여부	공고문 (선정기준 등 명시여부)
1	2019 지능형로봇산업육성사업 「인천로봇기업 제품(기술)사업화 지원사업」	○	○	○
2	2019년도 인천광역시 8대 전략산업(로봇산업) 디자인개발지원 분야 과제 모집	○	○	○
3	지능형로봇산업육성사업 2019 로보월드 참가기업 모집공고	×	×	×
4	지능형로봇산업육성사업 2019 일본국제로봇전 참가기업 모집공고	×	×	×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센터는 「2019년 로봇산업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 센터-715(2019.3.25.)] 에 따라 모집 공고문 및 참가신청서를 첨부하여 「2019년 로보월드 인천관 참가기업 모집」 [☞ 센터-1564(2019.6.10.)] 계획을 수립하였다.

모집공고문(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146호)을 확인한 결과 참가기업 선정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자체 평가기준에 의해 선발한다고만 명시하였다.

이후 「2019 로보월드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결과 보고」 [☞ 센터-1848(2019.7.11.)] 를 확인한 결과 평가방법으로 기업별 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사업담당자가 신청기업의 적정성 및 자격여부 검토 후 자체평가 실시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자체평가는 [표 2] 와 같이 평가배점을 정하여 정성평가(30점) 및 정량평가(70점)의 합산점수 기준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최종 합산점수 60점 이상인 기업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표 2] 평가배점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총점	배점	
정성 평가 (30)	시장성 (30)	- 전시회의 성격과 전시제품간의 부합성 - 전시회 및 국내외 시장 성공 가능성 여부 - 제품화에 따른 매출발생 가능성 - 예상 실적 및 향후 수출가능성	30	A등급(유망)	30
				B등급(개척가능)	20
				C등급(시장포화)	10
				D등급(부적합)	0
정량 평가 (70)	마케팅 역량 (20)	- 국문 및 외국어 홈페이지 보유여부	10	국문&외국어 보유	10
				국문 보유	5
				미보유	0
		- 홍보자료(카탈로그 및 브로셔) 준비 여부	10	국문&외국어 보유	10
				국문 보유	5
				미준비	0
	기업 역량 (30)	- 매출액(2018년 기준)	10	1,000백만 이하	10
				1,000~5,000백만	5
				5,000백만 이상	3
		- 공공인증 보유 여부(수출유망기업, 벤처 및 이노비즈, 우량기술기업, 프론티어 기업 등)	10	4건 이상	10
				3건	5
				미보유	0
		- 이전 전시회 참가 여부	10	0회	10
				1~3회	5
				4회 이상	0
	기술 역량 (20)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보유 여부	10	4건 이상	10
				1~3건	5
				미보유	0
		- 제품 및 기술의 해외인증 보유 여부	10	2건 이상	10
				1건	5
				미보유	0
합 계		100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평가항목 및 선정기준 등은 최종 참가 기업 선정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담당자는 공모전에 정당한 결재권자에게 공모사업 세부 선정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내부방침을 통하여 결재를 득하고 이를 공고문에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평가항목 중 정성평가는 총 배점의 30%를 차지하는 중요 항목으로써 평가내용이 계량화된 수치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심사 절차를 통하여 평가하여야 하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지 않고 사업담당자가 단독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최종 10개 기업을 선정하

여 통보하였다.

한편 자격조건은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공고문 모집대상에 인천소재 유망 로봇관련 중소기업이라고만 기재하고 소재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후 사업담당자는 자체평가 과정에서 주식회사 〰〰〰〰의 주소지가 인천(서구)임에도 불구하고 본사의 소재지가 인천이 아니라는 사유로 평가에서 제외하였다.

3. 로봇산업진흥시설 입주심사기준 부적정

테크노파크 「입주관리규정」 제5조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에 있어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하며, 입주신청 접수 시 입주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공해 발생업종 영위자, 기타 법인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입주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테크노파크 〰〰〰의 로봇산업진흥시설 입주기업 모집 및 심사 운영계획을 확인한 결과 입주심사 기준을 [표 1]과 같이 정하여 운영하였다.

[표 1] 입주심사 기준

- 선정기준 : 정량+정성+가산점 집계결과 70점 이상 기업 대상으로 입주 승인
- 심사항목

구 분	심 사 항 목 및 기 준			비 중
정량평가 (20점)	재무건전성	법인 및 개인사업자 (재무제표 有)	부채비율 : 부채총액 / 자기자본 × 100	10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10
		개인사업자 (재무제표 無)	성장성 : 매출액 증감비율	20
정성평가 (80점)	입주 자격		로봇 및 로봇 연관 기업(기관)	20
			로봇 발전 기여도	20
	사 업 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20
		보유제품 · 기술의 우수성(특허, 신기술)		10
		성장 및 발전 가능성		10
합 계				100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이때 정성적 평가는 입주자격, 사업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 정하여 로봇 관련 내·외부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하여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평가하였으며, 정량적 평가는 재무건전성⁶⁾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 정하여 사업부서가 자체평가 하였다.

심사항목 및 기준은 적정한 경쟁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해당 심사의 성질·규모 등과 입주제한 기준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적합하게 배점한도를 정해야 하나, 재무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항목인 정량적 평가를 전체배점의 20%로 하고 승인기준을 70점 이상으로 함으로써 정성적 평가만으로 선정이 용이하게 운영하였다.

그 결과 ‘2019년 로봇산업진흥시설 제2차 입주심사’, ‘2020년 로봇산업진흥시설 제2차 입주심사 및 연장심사’ 결과에서 정량적 평가 결과가 0점임에도, 정성적 평가 결과만으로 입주 선정된 사실이 있다.

6) 재무건전성 심사

- 재무제표 有 : 사업개시일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년도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은 각 항목당 0점으로 하고, 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10점으로 한다. 단, 사업개시일 3년 미만의 기업일 경우 만점(20점) 처리
- 재무제표 無 : 사업개시일 3년 이상이고 최근 3개년도 회계연도 말 결산 매출액이 2년 연속 증가한 기업은 20점, 1년 증가한 기업은 10점, 매출액 변동이 없거나 적자를 기록한 기업은 0점으로 한다. 단, 사업개시일 3년 미만의 기업일 경우 만점(20점) 처리

조치할 사항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은

[주의] ① 공모사업 추진 시 평가방법 및 선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계획을 수립한 후 공고문에 고지하고, 심사과정에서 이를 준수하여 선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아래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재)인천테크노파크(ㅋㅋㅋㅋ센터)	%%%
(재)인천테크노파크(ㅋㅋㅋㅋ센터)	###
(재)인천테크노파크(ㄱㄱㄱㄱ센터)	@@@
(재)인천테크노파크(ㄱㄱㄱㄱ센터 <現 ㄱㄱㄱㄱ>)	\$\$\$

[개선] 지원사업, 입주기업 모집 등에 따른 공모절차 추진 시 선정을 위한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e-다누리 창업센터 운영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재)인천테크노파크, 인천광역시

관 계 부 서 ^^ ^^본부(÷÷÷÷센터), 인천광역시(₩ ₩ ₩ ₩ 과)

내 용

(재)인천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는 2020년 2월 「e-다누리 창업센터 지원사업」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위·수탁 업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다.

※ 위·수탁 업무협약 개요

- 사업명 : 「e-다누리 창업센터 지원사업」
- 협약기간 : 2020.1.1. ~ 2022. 12.31.
- 협약당사자 : 인천광역시장, 인천테크노파크원장
- 위·수탁 업무
 - 센터 업무계획의 수립 및 집행 총괄
 - 센터 직원 채용, 복무, 보수지급 등 인사관리
 - 센터 건물 및 비품 관리
 - 센터 운영예산 편성 및 집행
 - 센터 업무 홍보
 - 센터 업무 현황 및 통계 작성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위탁사업비 집행 관리 미흡

협약서 제6조에 따르면 위탁사업비의 지급·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재정운영 조례를 준용하며, 위탁사업비로 발생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테크노파크가 재물등록 및 관리를 하고, 시에 별도의 “e-다누리 창업센터 운영 요령”을 준수하여 재물조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테크노파크 ÷÷÷÷센터의 ‘e-다누리 ÷÷÷÷ 지원사업’ 위탁사업비로 발

생되는 물품에 대한 재물등록 및 관리현황을 확인한 결과 위탁사업비로 취득한 물품에 대하여 재물 관리대장에 수불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시(₩ ₩ ₩ ₩)는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재물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 등을 적정하게 운영하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하나, ₩₩₩₩센터에서 별도의 재물 관리대장을 제출하지 않고 시설 안전 점검 결과만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요청을 하지 않았다.

2. e-다누리창업센터 입주자 모집 선정 절차 부적정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2021년 5월 12일 「e-다누리 ₩₩센터」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여성) 및 청년 (예비)여성 창업자의 전문마케터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e-다누리 ₩₩센터’ 입주자를 모집하였다.

입주자 모집에 있어 평가 계획은 최종 입주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절차 및 선정방법(평가항목, 평가방법, 선정 기준 등) 등에 대하여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정당한 결재권자에게 결재를 득한 후 공고문을 통하여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나 ‘e-다누리 ₩₩센터’ 입주자 모집 절차를 확인한 결과 평가방법, 선정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모집 공고문(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1-193호)에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처럼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2021년 6월 3일 외부 평가위원에 의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비 지출과 관련된 공문서(₩₩₩₩센터-5037호)에 ‘e-다누리 ₩₩센터 입주심사 서면평가 계획(안)’을 첨부하여 결재를 득한 후 진행하였다.

한편 ‘e-다누리 ₩₩센터 입주심사 서면평가 계획(안)’을 확인한 결과 평가방법은 외부전문가 2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표 심사기준에 맞춰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동점자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회의를 통하여 조율한다고 되어있으나, 평가 점수에 따른 최종 선정기준, 동점자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등은 정하지 않았다.

또한, 평가 당일 평가위원회 평가표를 평가위원에게 현장에서 노트북으로 작성하게 한 후 사업담당자가 작성된 평가표를 출력하여 평가위원의 서명을 받았다.

평가표는 입주자 선정에 중요한 증명서류에 해당됨으로 평가 점수가 수정되거나 조작될 수 있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평가 당일 평가위원이 현장에서 자필로 직접 작성하여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은

[시정] 관련 협약서 및 운영 요령 등을 준수하여 ‘e-다누리 ÷÷센터 지원사업’ 위탁사업비로 발생하는 물품에 대하여 재물 관리대장에 수불상황을 기록 관리하고, 인천광역시에 재물조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e-다누리 창업센터 입주자 모집 추진시 평가방법, 선정기준 등 심사과정 전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수립하여 입주자 선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과장)는

[주의] 「e-다누리 ÷÷센터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훈계) 요구

제 목 공사 준공검사 관리 소홀

기 관 명 (재)인천테크노파크

관 계 부 서 000000000000본부(000000000000센터)

내 용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르면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제9절 “6”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집행기준 제13장 제10절 “1”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재)인천테크노파크 〇〇〇〇〇〇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2020년 6월 26일에 [표 1] 과 같이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였다.

[표 1] 리모델링 공사 계약 집행현황

(단위:천원)

연 번	계약명	업체명	계약금액	준공 기한	준공계 제출일	준공검사 완료일	대금 지급일
1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	(주)〇〇〇	7,161,130	'20.11.30.	'20.11.30.	'20.12.13.	'20.12.28.
2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 리모델링 공사(소방)	(주)㉸㉸	1,749,396	'20.11.30.	'20.11.30.	'20.12.13.	'20.12.28.
3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 리모델링 공사(전기)	(주)††	2,311,359	'20.11.30.	'20.11.30.	'20.12.13.	'20.12.29.
4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 리모델링 공사(통신)	(주): : : :	2,651,620	'20.11.30.	'20.11.30.	'20.12.13.	'20.12.28.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 리모델링 공사」 계약상대자인 ****종합건설(주) 외 3개사는 2020년 11월 30일 준공계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인천스타트업파크 관리소(이하 “SP관소”라 한다)는 2020년 12월 10일에 리모델링 공정별 점검사항을 센터에 통보(SP관소-20-1210호)하였다.

센터는 2020년 12월 11일에 ‘SP관소-20-1210호’를 관련근거로 하여 ****종합건설(주) 외 3개사에게 스타트업파크 리모델링 공사 하자보수 처리 협조 요청 공문을 시행하였다.

한편 하자보수 리스트를 확인한 결과 공사범위에 해당되는 시정조치 사항

과 공사범위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물 원상복구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는 공사의 준공검사 완료일 이전에 계약이행 내용의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집행기준 제13장 제8절 및 제9절에 따르면 준공 검사 시에는 계약조건 및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준공되었는지 시정조치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내부검토 절차를 통하여 완료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테크노파크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조치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별도 확인 및 내부검토 없이 준공검사 완료 처리를 한 후 하자보수로 처리하는 등 준공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테크노파크는 스타트업파크 리모델링 공사로 발생한 시정조치 사항에 대하여 공사범위와 공사범위 제외부분을 구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원상복구를 지시한 것으로, 공사범위에 대한 원상복구는 준공검수 전까지 완료를 확인하였으나 공사범위 제외부분에서 발생한 하자책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관리사무소의 의견이 상의하여 협의가 완료된 후 진행하도록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테크노파크는 공사 이행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건축물에 대한 하자 및 원상복구 완료를 위하여 발주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의견에 대한 판단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물 원상복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준공검사 완료 처리한 것은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의]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재)인천테크노파크(○△○○△○○△본부) ₩ ₩ ₩

인천광역시 시정 요구

제 목 (주)인천○○○○ 자체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재)인천테크노파크

관 계 부 서 ☒☒☒☒본부(DDDD센터)

내 용

(주)인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7블럭(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40-1)의 ○○○○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표 1]과 같이 주주간 협약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재)인천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는 (주)인천○○○○(이하 “○○○○”라 한다)의 최대 주주(52.9%)로서, 테크노파크 로DDDD센터장 ◆◆◆은 ○○○○ 이사회에 기타비상무이사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표 1] (주)인천○○○○ 주주 구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기관명	지분율	출자금	비 고
총계		100%	22,523,400	
공공투자자	(재)인천테크노파크	52.90%	11,914,720	
	××××××	3.30%	744,310	
건설투자자	(주)♠♠	20.15%	4,538,440	
	(주)ㄱ ㄱ ㄱ ㄱ	11.37%	2,562,010	
	(주)○○	0.78	175,550	
전략적투자자	////////	4.24%	953,610	
	(주)ㄴㄴㄴㄴ	2.42%	544,920	
	ㄷ ㄷ ㄷ ㄷ (주)	2.42%	544,920	
	(주)*****	2.42%	544,920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주주간 협약에 따르면 당사자의 역할 및 임무로 인천광역시는 법령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에 사업시행 위탁, 인·허가, 지도감독, 업무조정 등이

있다. 또한 공공투자자는 공익시설 조성을 위한 기획조정 및 운영,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역할 및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한편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며, △△△△의 업무집행과 법령 및 정관에서 규정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고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하여야 하며,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임전결 규정 미비

△△△△ 정관 제34조에 따르면 회사의 내부규칙 및 규정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 위임전결 규정을 확인한 결과 [표 2] 와 같이 <별표 제1호> 위임전결 기준표를 정관에 어긋나게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보수 및 복리후생에 관한 제반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제정(2021.12.17.)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를 득하지 아니하고, 사장 전결로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표 2] <별표 제1호> 위임전결 기준표

구 분	업무 내용	전결권자			비 고
		팀장	본부장	사장	
제규정	입안(운용부서)	○			
	제규정 제정 및 개폐 결정			○	이사회 의결
	제정된 규정의 시행	○			
	지침의 제정 및 개폐				
	- 중요사항			○	
	- 일반사항		○		
	규정의 유권해석				
	- 중요사항			○	
	- 일반사항	○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복리후생 운영 부적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복리후생비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비용이다.

「2022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복리후생비는 법인과 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복리후생비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과도한 복리후생제도가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복리후생비에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고, 장기근속자·퇴직예정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 등은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규집을 확인한 결과 「취업규정」에 직원의 업무향상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복리후생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범위는 「보수 및 복리후생에 관한 제반 운영지침」에 따른다고 되어있다.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르면 회사 근로자의 업무향상과 자아실현, 복지지원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물품 또는 복리후생비를 [표 3]의 <별표 제7호> 기타 수당 등 복리후생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표 3] <별표 제7호> 기타 수당 등 복리후생

구분	내용	상세	비고
승진 축하금	3백만원	승진한 달의 급여일에 지급	
장기근속 축하금	10년 : 1백만원, 20년 2백만원, 30년 3백만원	장기근속 도달일에 일시금으로 지급	
건강진단	250,000원/인(부부)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	
교통보조비	200,000원/월		
통신보조비	대표이사 10만원/월, 본부장 월 8만원, 팀장 7만원/월, 팀원 5만원/월		
명절효도비	500,000원	설날 및 추석명절	
자기개발비	120만원/년	개인지출 후 분기마다 지급	
자격교육비	실비정산	업무와 관련된 자격취득 및 유지비용(연 100만원 한도)	
기념일	5만원 상당의 물품/연	생일, 결혼기념일 등 연 1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복리후생 수준을 기준으로 따르면 승진자·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은 사실상 급여보전의 성격으로서 지급이 금지

되는 사항으로, (주)인천△△△△의 승진축하금 및 장기근속 축하금을 지원하는 사항은 사회통념상 과도한 수준의 지원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직원에 대한 건강검진은 기관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야하며, 이 경우에도 건강검진비를 과도하게 지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므로, (주)인천△△△△의 근로자 외에 배우자 1인에 대해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은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인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과도한 복리후생제도가 운영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복지수준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 및 지침을 개정·관리하여야 한다.

조치할 사항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은

[시정] (주)인천△△△△의 자체규정 및 내부규칙 전반(지적사항 포함)에 대하여 검토 후, 미비한 관련 규정 및 내부규칙의 제·개정이 실시될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기관경고 · 주의 요구

제 목 급량비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재)인천테크노파크

관 계 부 서 ☺☺☺☺본부(☆☆☆☆팀)

내 용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의 ‘신용카드 등 사용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구매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카드를 업무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서벽자·산간오지 등 관서소재 지역으로서 경비를 사용할 지역에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수 없거나 대상 업소가 신용카드사용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부득이 그 업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와 외빈 초청 시 차량임차 등에 있어 동 업소가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단순한 부대경비 등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일반운영비(사무 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비,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신용카드 사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7]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급량비 중 특근매식비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액 예산이 지출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현금영수증을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인천테크노파크 「법인 신용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에 따르면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지출 발의를 하여야 하며 법인카드 지출결의서를 회계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나 급량비, 공용차량 통행료, 공용차량 주유비 등 월단위로 지출하는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9시부터 18시)외의 시간외 근무를 한자에게 급량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회계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평일 야간 및 휴일 시간외 근무자가 개인카드로 식당, 편의점 등에서 결제한 이후 월말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 급량비 지급 신청하면 직원 개인 계좌로 급량비를 지급(급량비 단가 8천원 초과인 경우 8천원까지만 지급)하고 있고 개인카드를 업무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음에도 전체 부서에서 개인카드 사용을 인정해 주는 등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회계 처리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은

[기관경고] 급량비 지급 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등 업무의 소홀함이 있어
엄중 경고하오니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훈계) 요구

제 목 주차장관제시스템 구매 부적정

기 관 명 (재)인천테크노파크

관 계 부 서 ☒☒☒☒본부(⊕⊕⊕⊕⊕본부), ⊖⊖⊖⊖지원단(⓪⓪⓪⓪팀)

내 용

1. 우수조달제품 구매 검토 소홀

(재)인천테크노파크의 「예산회계규정」 제86조에 따르면 법인은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계약사무의 처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물품·용역 2억 1천만 원)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특수한 기술개발제품이 필요하거나 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술개발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

한 경우 외에는 사업부서가 특정제품 규격 등을 설계도서에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조달청 고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동일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1억원 이상 구매할 경우에는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하여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가격 제안을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대 1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주차장 관제시스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어 있던 (주)※※※※과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을 통해 조달구매(3자단가 계약)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설계서 등에 특정모델 등을 지정하여 계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정제품이 명시되지 않은 표준 사양서로 설계한 후 발주 검토 시 계약 방법으로 우수조달제품으로 구매결정 한 후에 수의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나 우수조달제품 제품을 보유한 업체의 견적서(물품식별번호 표시)만으로 구매를 요청하였으며 성능,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 등에 대한 검토, 타제품 및 유사제품과의 비교, 일정한 규격 및 내용의 제시로 제조·구매가 불가능한지, 특정회사 제품이 반드시 필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였어야 하나 구매요구서에는 우수조달 제품에 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선정 제품에 대한 별도의 내부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감사기간 중 (주)※※※※에서 제출한 견적서의 품목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확인한 결과 계약품목 중 우수조달 제품으로 등록된 것은 주차주제어장치(물품식별번호23322527, 금액 18,664천원)뿐이며 나머지 품목은 우수조달제품이 아닌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등록되어 있고 차량인식기[모델DA-LPR-11000BW, 물품식별번호 22656697]를 조달우수제품으로 표시하여 제출하였으나 우수제품지정기간(2015.9.21.~2019.9.20.)이 만료된 제품이었다.

또한 구입물품 중 주차주제어장치, 차량인식기, 주차요금계산기, 주차차단기는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시)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확인한 결과 주차주제어장치는 57개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품목도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으로 여러 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기준에 따라 1억 원 이상의 물품구매 시 경쟁을 통하여 최대 10%의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않았다.

2. 계약물품의 변경 납품 부적정

⊕⊕⊕⊕⊕본부에서는 스타트업파크 주차장 관제시스템을 [표2]와 같이 조달구매 요청하였다.

구매 요구 당시 사업대지 내 진출 입구에 모두 차량단말기 설치를 고려했으나 장애인 주차장은 주차대수가 적고 사용빈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위한 주차요금계산기 설치를 추진하여 출입구 구성품(55,600천원)을 주차요금계산기 4대(60,780천원)로 교환 설치(가격차이 5,180천원은 업체 측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한다는 사유로 변경계약 없이 (주)※※※※의 구매물품 교환동의서를 첨부하여 변경 납품받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달청이 공급업체와 단가계약을 하고 수요기관에서 구매토록 하는 제3자단가계약에서 계약된 물품의 납품변경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인 조달청에 확인을 받아 변경 계약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변경계약 없이 계약물품과 다른 물품을 납품받았으며 실제 납품을 받지 않은 물품을 조달청에 해당 물품을 납품받은 것으로 검수보고 하였다.

[주의]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② 아래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재)인천테크노파크(⊕⊕⊕⊕⊕본부)	⌘⌘⌘
(재)인천테크노파크(⊕⊕⊕⊕⊕본부)	⬢⬢⬢
(재)인천테크노파크(⊠⊠⊠⊠⊠본부)	⌘⌘⌘

인천광역시 개선 요구

제 목 펀드운용사 선정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재)인천테크노파크

관 계 부 서 □□□□□(☒☒☒☒센터)

내 용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기술 역량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에게 안정적인 투자자금 공급으로 Scale-up (기술, 제품, 서비스, 생산, 기업 등의 규모 확대) 및 글로벌 스타기업 육성, 신규출자·창조성장 벤처펀드 회수금을 재출자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선순환 투자구조 확립을 목표로 [표1]과 같이 펀드운영 사업⁷⁾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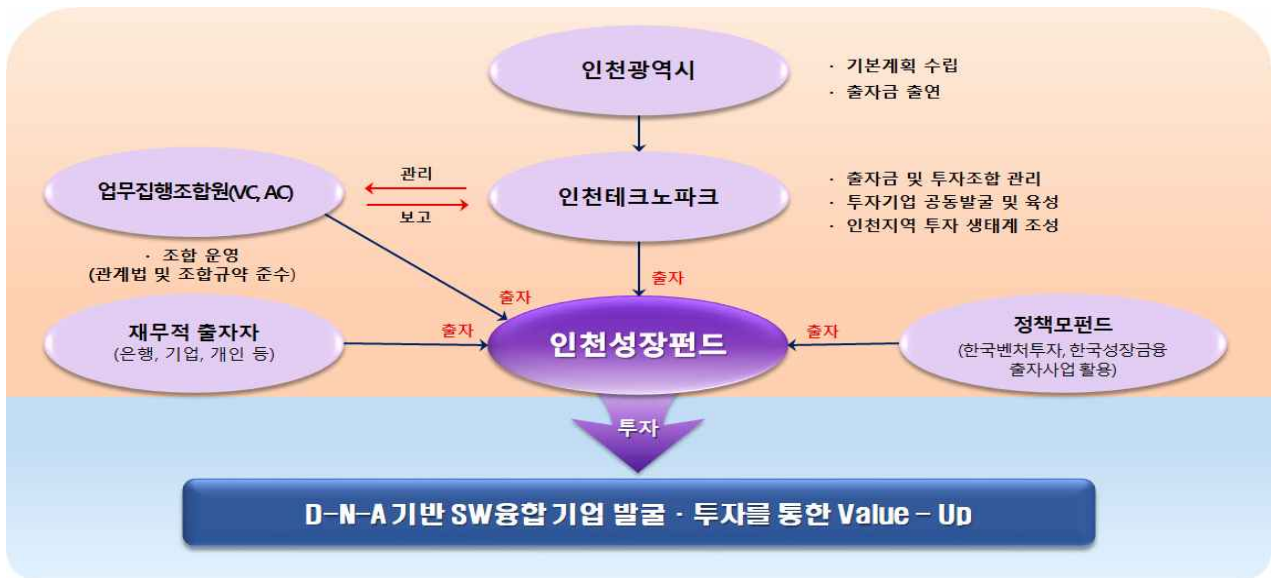
【표1】 펀드 운영 현황 및 추진체계

(단위:억원)

구 분	창조성장 벤처펀드 (SW융합클러스터 1.0전용펀드)					인천성장펀드							
						신규출자							재출자
	소 계	'14년	'16년	'17년	'18년	합 계	소 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3년~ '36년
출자(약정)액	100	20	40	20	20	200	100	10	10	10	35	35	100
조성목표	500	100	200	100	100	4,500	1,000	50	100	200	300	350	3,500
조 성 액	1,171.3	100	265	100	706.3	547.5	547.5	547.5	-	-	-	-	-
투자기한	'22년~ '26년	'22년	'24년	'25년	'26년	'28년~ '44년	'28년~ '32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1년~ '4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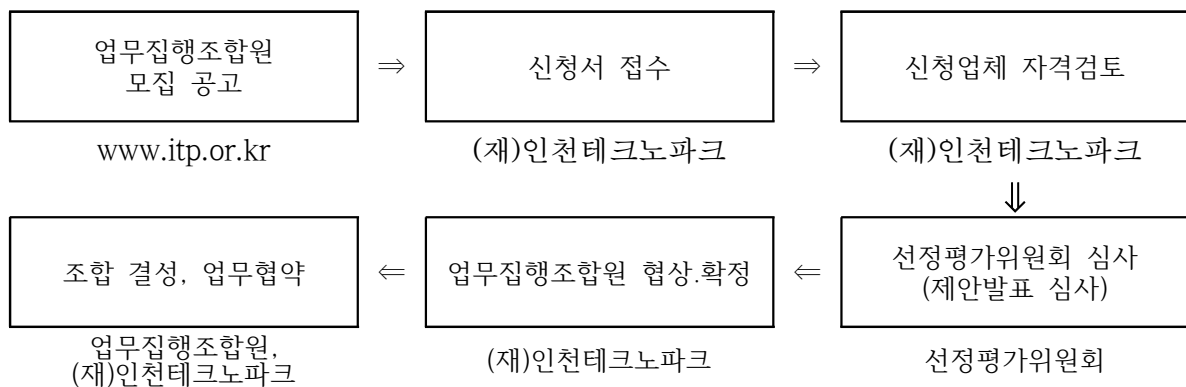
*사업비: 총200억 원(시비)

7) 펀드운영사업: 인천광역시와 (재)인천테크노파크가 사업협약을 체결하여 출자금 교부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재)인천테크노파크의 펀드 운용사 모집공고문에 따르면 운용사(업무집행조합원) 선정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며 선정평가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선정평가위원회에서는 1.펀드 결성 능력, 펀드 운영 전략(투자, 외수, 리스크 관리 등) 2. 투자집행 역량(운용사, 운용인력의 투자실적 및 전문성 등) 3. 인천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조합운영 목적이해도 및 실행 의지 4. 인천지역 투자기업 발굴·투자 계획, 인천시와의 협력 방안 등을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펀드 운영 및 선정평가위원회 관련 (재)인천테크노파크의 내부 규정·규칙·지침의 제정없이 펀드 운용사 모집공고[문서번호 ☒☒☒☒센터-2625(21.9.28)]

하고 모집공고 마감(21.10.14) 이후에 모집결과보고 및 선정평가계획을 수립[문서번호 ☒☒☒☒센터-3106(21.10.22)]하여 선정평가위원(7인)을 정하고 있고 모집 공고문에 평가항목과 배점 및 가점부여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등 모집공고의 명확화와 평가기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은

[개선] 펀드 운용사 선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펀드 조성 및 운영 관련 규칙이나 지침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BT센터 조성사업 정산 부적정

기 관 명 (재)인천테크노파크

관 계 부 서 ○○○○지원단(단지조성팀)

내 용

(재)인천테크노파크는 정관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 관리 및 지원사업(산업기술단지의 성공적 조성·운영 및 이를 위한 각종 개발사업, 목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동산 분양·임대를 통한 유수기관, 기업 및 단지편의시설의 집적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송도테크노파크 확대산업기술단지⁸⁾(R&D) 구역 민간사업자 투지유치사업에 따라 2011.4.11. ×××××(주)와 ‘BT센터 조성사업 사업협약⁹⁾’을 체결하고 (재)인천테크노파크는 토지(5,701m²)만 제공하고 민간사업자는 자금조달, 시공한 후 개발이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BT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BT센터 조성사업 사업협약서(2011.4.11.) 제40조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는 토지비(총사업비 중 일부로 인정) 3,478백만원 및 이자(6%)와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수익확정금 1,412백만원을 준공 후 4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에 정해진 사업기간 내에 준공 및 사업비 정산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지체상금으로 수익확정금에 대한 이자(6%)를 일할 계산하여 (재)인천테크노파크에 납부하기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주)는 2019.6.28. 준공이후 토지비

8) 산업기술단지 :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건물·시설 등의 집합체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현재 전국 19개 단지 지정)

9) BT센터 조성사업 : ○○○○과 ITP사업협약('07)→공사착공('08.06.)→○○○○부도('09.01)→×××(주)의 ○○○○의 사업자 지위 인수('09.09)→재착공('09.11)→×××(주)와 ITP사업협약('11.04)→공사중단('11.07)→공사재개('17.09)→준공('19.06)

3,478백만원(2019.9.28.납부), 확정이익금 1,412백만원(2019.10.25.납부)을 (재)인천테크노파크에 지급하였고 토지이자와 수익확정금에 대한 지체상금은 중재판정¹⁰⁾을 통해 토지비 지연이자 23.4억원과 지체금 3.2억원은 2020년 12월 지급 완료되었다.

그리고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민간사업자인 ○○○○○○(주)에서 제출한 사업비 집행내역을 토대로 최종 정산을 위한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 사업협약서 제41조에 따라 제3자를 통한 회계검증용역을 실시(2019.10~2020.12)하여 송도 BT센터 사업비 집행내역 회계용역 검토보고서의 예산액과 실행액 비교표 상의 차이 금액을 [표1]과 같이 모두 인정하는 송도 BT센터 조성사업 최종 정산 보고 문서[○○○○지원단 ~~○○○○~~팀-59(2021.1.11.)]를 ○○○○지원단장이 전결로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표1】 사업손익 결산 보고

(단위:천원)

구분	V.A.T.별도					V.A..T.포함	
	변경협약(2011.04.11.)㉔		사업정산(2020.12.31.)㉔		차액(㉔-㉔)	사업손익	정산
사업수지계	59,999,960		59,893,300		△106,660	64,374,122	64,374,122
지출합계	57,593,226		63,055,292		5,462,066	73,793,305	63,010,095
사업이익	2,406,734		△3,161,992		△5,568,726	△3,599,473	1,364,028
(은행예금이자 등)			57,658			47,816	47,816
사업이익정산	분배전 경상이익	2,406,734	분배전 경상이익	△3,104,334	△5,511,068	△3,551,657	1,411,844
	송도테크노파크	1,411,844	인천테크노파크	1,411,844	0	1,411,844	1,411,844
	코오롱건설컨소시엄	994,890	코오롱글로벌	△4,516,178	△5,511,068	△4,963,501	0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정산합의서에 따르면 회계용역 검토결과를 모두 반영하여 기존 사업협약서 고정비로 정하고 있는 건축공사비, 설계비, 분양용역비 및 변동비인 지출항목은 실제 집행

10) 중재판정 : ○○○○○○○(주)의 지체금(토지비 및 수익확정금 지연이자)에 대한 중재신청('20.5)→ 중재판정('20.12)
 ※중재판정금(26.6억원)=토지비 지연이자(23.4억원)+사업이행지체금(3.2억원)

액(각 컨소시엄 구성자가 자체적으로 지출한 공사비 및 운영비는 불인정)을 모두 인정하여 정산하였다.

그러나 (재)인천테크노파크의 「위임전결규칙」 제4조에 따르면 모든 문서의 최종결재권은 원장에게 있다. 다만 원장이 업무내용에 따라 본부장, 부서장을 전결권자로 지정하여 결재권을 위임하여 전결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개발관련 사업계약직무 중 사업 협약 및 계약(변경), 최종결과, 평가는 원장 전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단지조성에 관한 제반사업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관 제24조에 따라 단지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단지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2000.12.20.)하여 단지조성에 관한 기본방향, 단지 내 신규 토지공급(분양 및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 단지분양과 관련된 정책 사항, 단지입주자 지원에 관한 사항, 단지 주변지역 개발 활성화에 관한 사항, 단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정책 결정 사항,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단지조성에 따른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송도 2중심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최종정산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지원단 αααα팀에서는 사업협약서(2011.4.11.)상의 예산액대비 실제 집행액(2020.12.31.)의 차이를 모두 인정하여 정산한 사유는 사업협약서 제41조(사업비 정산기준) 제3항에 따라 사업비 중 건축공사비, 설계비, 분양용역비를 제외한 모든 지출항목은 정산한다. 단 비목별 정산금액은 예상 사업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제15조(사업비의 변경)에 따른다. 단, 감리비의 초과분에 대해서 예비비의 일부를 항목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제15조(사업비의 변경) 제1항 민간사업자는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업비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과

그동안의 중흥센터 기성검사 결과 보고 문서(○○○○지원단 α α α α 팀-2358(2019.10.24), 2734(2019.12.24)]를 통해 공사비는 현재 잠정금액으로 사업협약서상의 공사비 40,419,613천원과의 차이는 회계 용역 검증을 통하여 확정할 예정으로 원장까지 결재하였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의견에 대한 판단 사업협약서(2011.4.11.) 제41조에 따른 사업비 정산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건축공사비 예정금은 40,419,632천원으로 확정하며 재단은 실시설계 완료시 산출내역을 토대로 관련 법률 검토 후 제3자 검증에 대한 세부기준 및 지침을 수립하고 제3자 지정을 통한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설계비는 1,493,336천원으로 하고 분양용역비는 분양대금의 4.2%(인센티브포함)로 한다.

③ 사업비 중 건축공사비, 설계비, 분양용역비를 제외한 모든 지출항목은 정산한다. 단, 비목별 정산금액은 예상 사업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제15조(사업비의 변경)에 따른다.

④ 분양 지연으로 인한 자금과부족이 발생한 경우 자금차입에 따른 금융비용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한다.

⑤ 정산대상 사업비의 경우 집행예정내역에 대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비 정산에 따른 사업비 예상집행금액과 실 집행금액 차이금액은 이익금액으로 배분은 재단(58.7%) : 민간사업자(41.3%)를 원칙으로 한다.

⑥ 제41조 제6항 사업협약 전 선 집행된 비용에 대하여는 사업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내역을 제출하여 재단과 민간사업자 주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업협약서상 고정비인 건축공사비 단가변경(면적당 1,228천원에서 1,406천원 인상), 분양수수료(분양금액×4.2%에서 5.15% 인상) 등에 대한 실제집행액 인정 여부, 정산항목의 실제집행액 인정 여부, 대동건설 공사비(3,684,795천원)

및 사업비(1,045,000천원) 정산분 인정 여부 등에 따라 이익금액이 변경되므로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사업협약서, XXXXX(주) 제안내용, 제3자 회계용역 결과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대한 논의 및 의사결정 과정이 있어야 하나 단지운영위원회 등에서 심의되지 않은 채 정산합의서 체결이 이루어졌다.

조치할 사항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은

[주의] 민간사업자 투지유치사업 정산 시 관련 규칙·규정 및 정산합의서를 준수하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통 보

제 목 통합법인 출범일 유급휴가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재)인천테크노파크

관 계 부 서 ☺☺☺☺본부(☺☺☺☺팀)

내 용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 외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휴가(경조사휴가, 출산휴가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해당하는 항목은 제외)를 운영하지 아니하며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사용 측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 외에 유급휴일을 운영하면 그 사용일수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했을 경우와 비교하여 유급휴일을 사용한 직원들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유급휴일에 근무한 직원들에게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등 유급휴일 운영에 따른 수당 지급으로 해당 금액만큼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재)인천테크노파크는 경제통상진흥원, 정보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를 통합(2016년 7월)한 이후 인사관리규칙 제30조¹¹⁾(유급휴일)에 따라 매년 7월 1일을 통합법인 출범일로 지정하여 유급휴일로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통합출범일 출근자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통합법인 출범일에 근무한 직원들 96명에게는 유급휴일 운영

11) 인사관리규칙 제30조에 따르면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통합법인 출범일, 기타 정부 또는 테크노파크가 임시 휴일로 정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규정

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12,568천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 외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유급휴일을 운영하지 않아야 함으로 통합출범일을 유급휴일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은

[통보] 재단 통합법인 출범일을 유급휴가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예산의 편성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재)인천테크노파크

관 계 부 서 ☺☺☺☺본부(☹☹☹☹팀)

내 용

(재)인천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로서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방출연기관이다.

1. 목적사업 예산의 편성 방식 부적정

산업기술단지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르면 같은 법 제4조(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에도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의5(재산 및 회계) 제5항에 따르면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필요한 회계기준 및 방식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2017.7.26. 이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테크노파크에서는 감사대상기간(2019. 1월 이후) 편성한 예산서의 예산편성·운영 지침에 “법률적 특례 적용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 의한 표준예산을 우선 적용하고, 그 밖에 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을 준용하여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57조(표준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부장관(2017.8.29. 이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이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각 사업시행자에게 표준규정 등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를 따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 규정 등의 개정을 통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여, 2016.8.5.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테크노파크 수입지출예산서 표준(안) 통보¹²⁾」 문서를 각 지역별 테크노파크에 시행하였다.

「테크노파크 수입지출예산서 표준(안) 통보」의 [붙임1] 표준 수입지출예산서(안) 양식에 따르면 테크노파크의 수입지출예산서는 1. 예산총괄표, 2. 예산목별조서(수입예산목별조서, 지출예산목별조서, 기타), 3. 수입지출예산 세부내역(수입예산서 세부내역, 지출예산서 세부내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입예산서 세부내역의 목적사업¹³⁾ 및 지출예산서 세부내역의 목적사업비지출¹⁴⁾은 [표1]과 같이 사업별 예산과목을 구분하여 편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표1] 수입, 지출예산서 세부내역 '목적사업비' 편성 양식

<수입예산서 세부내역>				
장	관	항	목	내역
사업수입				
	목적사업수입			
		당해연도		
			국비	국비출연금
			도비	광역시자체출연금
			시군비	기초지자체 출연금
			민간	정부외 출연금
			환수금	사업비 환수금
			예금이자	예측하여 작성
		이월금		
			국비	국비출연금
			도비	광역시자체출연금
			시군비	기초지자체출연금

12) 지역산업과-64(2016.8.5.)

13) 「테크노파크 수입지출예산서 표준(안) 통보」 [붙임2] 주요 과목해소 1. 예산총괄표 설명 - 수입 - 목적사업수입 : 현재 목적사업과 수탁사업 및 기타의 사업으로 외부에서 지원되는 또는 사업비 출연을 통해 진행되는 모든 사업

14) 「테크노파크 수입지출예산서 표준(안) 통보」 [붙임2] 주요 과목해소 1. 예산총괄표 설명 - 지출 - 목적사업비지출 : 티파가 직접재원을 운영하는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민간	정부외 출연금
			반환금	정산잔액반환금 (정산 불인정 반환금은 사업외비용으로 편성)
<지출예산서 세부내역>				
장	관	항	목	산출내역
목적사업비지출				
00지원사업	총사업비			사업별로 작성
	사업비(당해연도)			
		인건비		
			기본금	
			제수당	
			연금부담금	
			퇴직충당금	
		직접사업비		
			재료구입비	
			시제품제작비	
			수선유지비	
			:	
			사업관리비	
		간접비		
			간접비	
	사업비(이월금)			당해연도와 동일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반환금		
			반환금	

※ 「테크노파크 수입지출예산서 표준(안) 통보」 [붙임1] 표준 수입지출예산서(안) 양식 발췌

따라서 테크노파크에서는 목적사업(대행사업 포함, 이하 같다)별 수입 및 지출예산의 세부내역을 편성함에 있어 ‘표준 수입지출예산서(안) 양식’에서와 같이 각 사업별 예산과목을 구분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테크노파크에서는 감사대상기간(2019. 1월 이후) 목적사업별 수입 및 지출예산을 ‘표준 수입지출예산서(안) 양식’에 따라 사업별로 구분 편성하지 않고 각 사업별 총액으로만 편성함으로써 각 목적사업 내 예산과목별 이용, 전용, 조정 등 예산의 변경사용 발생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예산을 편성하였다.

2. 예산서 첨부자료 미작성

「테크노파크 수입지출예산서 표준(안) 통보」의 [붙임1]표준 수입지출예산서(안) 양식에 따르면 테크노파크 수입지출예산서 항목 중 2. 예산목별조서는 수입예산목별조서, 지출예산목별조서, 기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에 계속비조서, 기본재산 명세서, 보통재산 명세서, 총인건비 명세서 등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지방출자출연법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예산의 편성 등) 제1항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이 편성하는 예산에는 1. 소속 임직원 등의 인건비, 2. 계속비에 관한 설명서, 3.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4. 예산이월 설명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통보하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의 [붙임1]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 예산서 작성 서식 <별첨 1~6>으로 임직원 등의 인건비, 계속비설명서, 채무부담행위설명서, 예산이월설명서, 공사채 등 외부자금 차입 및 상환설명서,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설명서의 서식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테크노파크에서는 예산편성 시 예산서에 계속비¹⁵⁾조서, 기본재산 명세서, 보통재산 명세서, 총인건비 명세서 등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적정한 서식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테크노파크의 2019년도부터 2022년도 예산서 상에는 계속비조서, 기본재산 명세서, 보통재산 명세서, 총인건비 명세서가 첨부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계속비 대상 사업의 연도별 적정 사업비 확보 및 집행현황, 재산현황, 총인건비 세부현황 등 이사회 의사결정 안건의 심의 등과 관련한 중요 자료의 작성 및 제출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예산결산 실시 미흡

15)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거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37조(회계처리의 기준 및 원칙) 제2항에 따르면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를 하는 데 필요한 회계기준 및 방식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른 법에 근거한 회계처리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기준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 테크노파크의 재무회계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2020사업연도 결산부터 통보한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 III. 지방출자·출연기관 유형별 회계처리에 따르면 결산의 유형을 1. 재무결산과 2. 예산결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결산유형별 처리기준 및 서식 등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테크노파크에서는 재무결산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실시하고, 예산결산은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테크노파크에서는 감사대상기간(2019. 1월 이후) 매 사업연도별 재무결산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였음에도, 예산결산은 2019사업연도와 2020사업연도에 실시하며 예산과목별 예산액 대비 결산액과 집행률만을 작성하는 것에 그쳐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사항 등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었고,

출연기관이 시행한 사업이 당초에 기대했던 경제적 효율성, 주민편익에의 기여도, 지역발전에의 공헌도 등을 실현하였는가를 분석·평가하고 재정구조의 건전성, 재정의 건실성·안전성 등을 분석 검토하는 자료 내지 지표로 활용되기 위한 예산결산의 목적 달성에 미흡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은

- [주의] ① 수입 및 지출예산서 세부내역의 목적사업비 예산 편성 시 표준 수입 지출예산서(안) 양식에 따라 목적사업별 예산과목을 구분하여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 ② 예산편성 시 예산서에 계속비조서, 기본재산 명세서, 보통재산 명세서, 총인건비 명세서 등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등 에 따른 적정한 서식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③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예산결산에 철저를 기하시어 기관이 시행한 사업의 효율성 분석 자료로 활용하는 등 기관의 발전을 위한 예산결산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경영시스템 고도화 관련 사업 대가 산정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재)인천테크노파크

관 계 부 서 ☺☺☺☺본부(☺☺☺☺팀, ㄱㄱㄱㄱ팀)

내 용

(재)인천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 ☺☺☺☺본부에서는 2019년도 하반기 추진 전략의 세부 과제로 ‘경영시스템고도화’를 추진하며, 2006. 6월에 사용 개시한 現 전자결재 및 경영정보시스템의 시스템 노후화와 타시스템(재무회계, 인사급여 등)과의 연동부족에 따른 업무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표1]과 같이 2019년 ‘업무전산화 정보화전략계획(ISP)’ 용역을 시작으로 2021년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용역’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감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표1] 경영시스템 고도화 관련 용역계약 현황

(단위 : 천 원)

연도	용역사업명	계약방법	계약기간	계약금액
2019	업무전산화 정보화전략(ISP) 수립용역	협상에의한계약 (조달청계약)	2019.12. 5.~2020. 4. 3.	81,023
2021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협상에의한계약 (유찰 후 수의계약)	2021. 5.17.~진행중 (준공기한 : 2022. 5.16.)	1,031,000
2021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감리용역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	2021. 8. 6.~진행중 (준공기한 : 2022. 5.16.)	49,020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 제1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과 소프트웨어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에 따르면 적정한 수준의 대가 지급을 위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조사하여 「통계법」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 및 공표하는 인건비 통계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는 2012.2.26. 기존의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52호) 폐지 이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0조(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 시 준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제정하여 매년 개정판을 공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절 통칙 2.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예정가격이란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이며, 견적가격은 해당 기술력과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나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3.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르면 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나.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다. 공사에 있어서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가격 라. “가”부터 “다”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이나 견적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5관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1.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주요 기준으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現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및 노임단가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테크노파크에서는 [표1]과 같은 경영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등에 따른 원가 계산으로 각 사업별 적정한 사업 예산을 산출하여 입찰 및 계약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나 테크노파크에서는 입찰 및 계약을 위해 적정 대가 기준을 활용한 원가 계산을 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한 견적서(2개)를 비교한 후 낮은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입찰을 추진함으로써 관련 협회에서 공표한 적정한 대가 기준 대비 42.01%에서 61.43%까지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실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적정 대가 기준에 따른 사업 예산을 확보했을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게 되었다.

사업별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업무전산화 정보화전략(ISP) 수립용역’은 당초 조달청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의뢰한 후 조달청에서 견적가격에 의한 예산 산출액 불일치 및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상 투입공수 방식 양식에 따른 산출내역 보완과 관련한 협의사항을 통보하였음에도 자체적으로 적정대가 기준에 따른 사업비를 재산정하지 않고, 당초 사업비 산정의 기준이 된 견적서 제출 업체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상 투입공수 방식에 따른 적정 대가 산출내역과 그 적정 대가 산출액에 업체의 견적 할인율인 46.53%를 적용한 견적서를 함께 제출 받아 할인된 견적가격을 기준으로한 예산 산출내역을 조달청에 다시 제출함으로써 적정대가 대비 46.53% 이상의 할인이 가능한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은 사업 추진 계획¹⁶⁾의 단계별 개발 예산계획에 있어서 [표3]과 같이 ‘업무전산화 정보화전략(ISP) 수립용역’(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등을 적용하여 소요예산 산출)의 단계별 소요예산과 다르게 개발

16) 2020년 12월 31일 제385(2021.1.28.)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2021년 계획 보고”

비용 및 추진 시기 등을 조정한 예산계획을 수립하면서 ‘업무전산화 정보화전략(ISP) 수립용역’ 결과에 따른 예산액을 반영하지 않은 적정 사유 및 조정한 예산액의 적정대가 적용 여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 계획에 반영된 단계별 소요예산의 적정대가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체 수립한 계획의 1단계(2021년) 사업비를 기준으로 제3자가 제출한 견적서 2개를 비교하여 낮은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을 위한 예산액을 산출함으로써 ‘업무전산화 정보화전략(ISP) 수립용역’에서 산출된 소요예산 대비 [표2]와 같이 42.01%가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이 실시되었고, 적정대가 대비 42.01% 이상의 할인이 가능한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입찰 결과 1개 업체만이 응찰하여 유찰된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항을 적용하여 재공고 입찰 없이 응찰한 1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¹⁷⁾를 실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경쟁입찰 성립 가능성을 저해하였다.

[표3]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2021년 계획 보고 상 단계별 개발 예산

(단위 : 백만 원)

개발과제			ISP 용역결과		1단계	2단계	ISP대비 증감	비고
			2021년	2022년	2021년	2022년		
1	경영지원시스템 구축							
		·예산, 인사/급여, 회계, 자산, 구매/계약, 총무 감리	1,113.2		758		△355.2	비용 조정
			(개발비 :750.2)		(개발비 :450)		(△300.2)	
			(H/W,S/W :283)		(H/W,S/W :268)		(△15)	
			(감리:80)		(감리:40)		(△40)	
		·임대관리업무		180		180		
2	전자결재/그룹웨어 구축		166.1		166.1			
3	업무포털시스템 구축 · SSO시스템 및 통합검색		121			121		시기 조정
4	사업관리시스템 구축 · 사업관리, 기업 내역관리		197.9		197.9			
5	기업지원시스템 구축		56.5		56.5			

17) 제안서 평가 결과 : 기술능력평가배점(90점)의 94.09%인 84.6786점 득점

개발과제		ISP 용역결과		1단계	2단계	ISP대비 증감	비고
		2021년	2022년	2021년	2022년		
	· 기업지원 이력 및 통계관리						
6	스마트 오피스 구축						
	· 모바일 이미지변환 솔루션	34			34		시기 조정
	· 보안용 서버/장비/SW				387	387	신설
7	홈페이지 구축		79.2		79.2		
8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 부서 성과평가/실적관리	101.2			101.2		시기 조정
9	통합자료관리시스템 구축 · 문서 및 자료공유 체계구현		188.8		188.8		
합 계 (VAT 포함)		1,789.9	448	1,178.5	1,091.2		
총 합 계		2,237.9		2,269.7		31.8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이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따라 사업비 5억 원 이상인 감리대상 사업임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감리용역’을 시행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방식) 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제출받은 2개의 견적서를 비교한 예산산출액을 기준으로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조달청에서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감리용역’은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로 소프트웨어사업자 면허 추가사항을 검토하고 견적서로 구성된 예산산출 내역서를 정보시스템 감리대가 산정에 따라 회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협의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테크노파크에서는 조달청의 요청에 따라 대가를 산정할 경우 견적서에 따라 확보한 예산금액을 초과하는 것을 이유로 조달청 입찰 의뢰 사항을 취소하고, 견적 받은 가격을 기준으로 자체 일반입찰을 실시하여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감리 용역’은 적정 대가기준액 대비 [표2]와 같이 61.43% 할인된 가격으로 입찰을 실시하였고, 적정 대가 기준으로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게 되었으며,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등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로 낙찰자 선정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일반입찰을 통한 적격심사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테크노파크에서 경영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추진한 용역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규정에 따른 적정한 기준을 적용한 사업비를 산출했어야 함에도 제3자로부터 제출 받은 견적서를 비교하는 방법으로만 사업비를 산출하고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적정 대가에 따른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사업추진에 적합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계약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은

[주의] 소프트웨어사업 등의 추진 시 계약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통한 당초 사업 목적 실현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 계약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에 대한 업무 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훈계) · 개선 요구

제 목 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재)인천테크노파크

관 계 부 서 ☺☺☺☺본부(ㄱㄱㄱㄱ팀), ☹☹☹☹지원단(㉠㉠㉠㉠팀)

내 용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5(재산 및 회계) 제5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40조(계약) 제1항에 따르면 계약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및 시행령에 따라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인천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 「예산회계규정」 제86조(준용)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업무 처리에 있어 지방계약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지방계약예규”라 한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테크노파크에서는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계약예규 등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1. 사회적약자기업 등 대상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하 “사회적약자기업 등”이라 한다)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제5호마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은 사회적약자기업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2020.7.15.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이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고시”라 한다)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을 고시하고 있다.(감사일 현재 고시 기준 2022.6.30.까지)

이에 따라 2020.7.15.부터의 사회적약자기업 등과의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어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까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하되,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각 호로 정하며 제2호 단서에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사회적약자기업 등과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테크노파크에서는 사회적약자기업 등과 계약체결 시에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럼에도 테크노파크의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사항이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여 감사대상기간(2019. 1월 이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10건의 계약을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으로써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하였다.


2. 분할계약 체결 부적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하며, 제3항에 따르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칙 5. 분할계약의 금지에 따르면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테크노파크에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제1항 단서¹⁸⁾에 따라 분할계약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를 사업량 및 시기적으로 분할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테크노파크에서는 2021년에 미추홀타워 OA타일 구매 및 교체 계약을 추진하며, 기존 인천시청이 사용하던 공간 5개층(12,14,15,18,19층)의 이전(퇴거)에 따른 OA타일 교체사항에 대하여 3개층(14,18,19층)은 신규 입주 협의를 사유로 선시 공하고 2개층(12,15층)은 퇴실 후 진행하는 사항으로 2차로 나누어 추진하였고, 이후 인천시 과의 요청¹⁹⁾에 따라 OA타일을 구매하였으며, 테크노파크 

18)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19) 과-9105(2021.6.2.)호 “120미추홀콜센터 사무환경 개선에 따른 바닥재(O.A타일) 지원 요청”

20) 팀의 요청²⁰⁾에 따라 3개층(1,6,8층)에 대한 OA타일을 교체하는 것으로 하여 공사 및 물품계약을 6건으로 나누어 추진하였다.

그러나 해당 OA타일 교체 사항은 동일한 장소인 미추홀타워에서 2021년 중에 OA타일을 구매하여 시공하는 것으로 유사하게 추진되는 사항임을 고려하여 일괄 구매 및 시공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입찰 등 경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적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소홀함으로써 공사 및 물품계약을 6건으로 분할하여 1인 건적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계약체결의 공정성을 저해하였다.

20) 2020팀-2909(2021.7.13.)호 “미추홀타워 사무환경 개선계획”

조치할 사항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은

[주의] ① 수의계약 체결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가능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공정한 계약이 체결되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사업추진 시 전체적인 사업물량 및 추진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부적정한 분할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직원 대상 계약 관련 교육 이수 등을 통해 사업추진에 있어서 규정에 적합한 공정한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② 아래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재)인천테크노파크(㉠㉠㉠㉠팀) ㉠㉠㉠

(재)인천테크노파크(㉡㉡㉡㉡팀) ㉡㉡㉡

(재)인천테크노파크(㉢㉢㉢㉢팀) ㉢㉢㉢

[개선] 사업추진 시 종합 및 세부계획의 수립과 추진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검토 보고(결재)가 이루어진 후 계약 체결을 의뢰할 수 있도록 계약과 관련한 사업추진 절차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기관경고·주의요구

제 목 계약업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재)인천테크노파크

관 계 부 서 ⊕⊕⊕⊕본부(ᄇᄇᄇᄇ팀)

내 용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5(재산 및 회계) 제5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40조(계약) 제1항에 따르면 계약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및 시행령에 따라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인천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 「예산회계규정」 제86조(준용)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업무 처리에 있어 지방계약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지방계약예규”라 한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테크노파크에서는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계약예규 등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1. 선금의 지급검토 소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선금의 지급 1. 선금 지급 가. 선금의 의의에 따르면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 선금 지급 대상에 따르면 선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으로 지급하되,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단순노무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 의무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 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물품과 용역 계약에 있어서 초기에 기술개발자금이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70% 범위 이내에서 당초 선금지급 규모보다 10% 추가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선금지급을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5. 선금의 사용과 정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 지급 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청구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도록 하며, 계약목적에 달성하기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노임 지급과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선금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사항을 선금 지급조건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테크노파크의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신청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를 내부 보고(결재) 등을 통해 결정하여야 하며, 선금지급 시 선금지급조건을 명시하여 통보함으로써 선금 지급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테크노파크 계약담당자는 감사대상기간(2019. 1월 이후) 중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157건, 24,457,475천 원의 선금을 지급하며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 신청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하지 않

았고, 선금지급 시 선금지급조건을 명시하여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선금의 지급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계약목적물의 하자관리에 관한 사항

가. 담보책임 존속기간 시작일 산정 부적정

지방계약법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제2항에 따르면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1항에 따르면 공사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따르면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테크노파크의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체결 시 계약목적물별 규정에 따른 적정한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작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테크노파크의 계약담당자는 감사대상기간(2019. 1월 이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에 있는 197건의 계약 중 [붙임1]과 같이 120건에 대한 담보책임 존속기간의 시작일을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정하지 않음으로써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부적정하게 설정하였다.

나. 정기하자검사 및 만료하자검사 실시 미흡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 검사)에 따르면 공사계약의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서 따로 최종검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테크노파크에서는 공사·용역·물품계약의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서 따로 최종검사를 하고 최종검사 완료 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완료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테크노파크에서는 감사대상기간(2019. 1월 이후)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에 있는 197건의 공사·용역·물품계약 중 [붙임2]와 같이 170건의 계약에 대한 정기하자검사를 연 2회에 미치지 못하는 횟수로 실시하거나 미실시하였고, [붙임3]과 같이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49건의 계약에 대한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실시하는 등 정기하자검사와 만료하자검사를 미흡하게 실시하였다.

특히 테크노파크의 계약담당자는 감사대상기간 중 매년 상·하반기 각 사업부서에 정기하자검사 및 만료하자검사 실시를 요청하는 문서를 시행하며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건에 대하여는 하자검사조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 각 사업부서로부터 통보된 하자검사 실시 결과를 접수하면서도 하자검사조서의 보관 외 사업부서의 하자검사 대상건에 대한 적정 하자검사 실시 현황을 총괄하여 관리하지 않음으로써 정기하자검사 및 만료검사와 관련하여 부적정 사항이 발생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은

[기관경고] 선금의 지급 검토 및 담보책임 존속기간 설정, 하자검사 실시와 관련하여 계약부서의 관리 미흡과 더불어 사업 추진부서의 계약사항에 대한 검토 및 이행 등의 미흡함도 연관되어 있어 기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바 엄중 경고하오니,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관련 업무의 검토 및 이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 의] ① 선금 지급 신청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 및 선금 지급 조건 등을 검토하여 내부 보고(결재)를 통한 지급 결정을 하시기 바라며, 계약 상대방에 대한 선금 지급 통보 시 선금 지급 조건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② 계약목적물에 대한 담보책임 존속기간 설정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정 기간을 설정하시기 바라며, 정기하자검사 및 만료하자검사의 실시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자검사 시행 및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건설공사 공사감독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재)인천테크노파크

관 계 부 서 ☹☹☹☹지원단(⓪⓪⓪⓪팀),
☹☹☹☹본부(+ + + + + 센터, < < < < < 센터)

내 용

(재)인천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에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95건의 공사 중 5건의 설계변경을 시행하였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32조(공사감독자의 의견제시 등)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 변경 요구 등 실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감독자는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같은 지침 제148조(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제1항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변경 시 계약서류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하고, 발주청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갯벌타워 20층 리모델링공사(건축, 기계)’, ‘인천 VR·AR 제작거점센터 구축공사(건축, 기계)’, ‘인천콘텐츠기업육성센터 조성공사(실내건축, 전기, 소방)’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자의 요청과 설계내역상 누락 및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시공사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테크노파크에 실정보고 하였다.

그러나, 테크노파크는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확인 후 방침을 득하고 시공사에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시공사의 실정보고 만을 근거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수행 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은

[주의] ① 「지방계약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전력시설물 공사감독업무 수행지침」 등 관계법규를 숙지하여 공사의 공정관리업무와 설계변경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개선 요구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재)인천테크노파크

관 계 부 서 ○○○○지원단(ㄱㄱㄱ팀), ☎☎☎☎본부(www센터, ☎☎☎☎센터,
◆◆◆◆◆센터), ☎☎☎☎본부(⊕⊕⊕⊕⊕본부)

내 용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 계약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같은 기준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자)이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131조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을 검토하여야 하며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재)인천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안전관리비가 계상된 공사 39건의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12건의 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현장경계 펜스, 차량유도등, 라바콘’ 등의 항목에 대한 경비(약 17,052천 원)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테크노파크에서는 공사 수행에 따른 안전관리비 정산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하여 감액하거나 반환요구 없이 집행하였고, 시공자가 안전장비 지급대장 미 제출, 지급된 안전장비를 착용한 공사현장 작업사진 미 제출 등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내역을 제출하였음에도 공사감독자가 관련규정을 명확히 숙지하지 못해 증빙서류의 보완 지시 없이 정산 처리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가이드라인 부재

테크노파크에서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사용 확인 및 정산 등에 있어 정산 가이드라인이 없어 공사마다 편차 있는 사용내역을 시공자가 제출하여도 감액 조정 없이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2020년 부평테크시티주변 디자인환경개선 사업 2차 야간조명 및 미디어설치공사’에 안전화 1켤레를 175,500원에 구입한 반면, ‘2020년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에서는 안전화 1켤레를 37,500원에 구입하였다.

또한 테크노파크는 안전모에 대하여 ‘2020년 인천콘텐츠기업육성센터 조성 통신공사’에 개당 30,000원에 구입한 반면, ‘2020년 부평테크시티주변 디자인환경개선 사업 3차 조경공사’에서는 개당 5,000원으로 구입하는 등 시공사가 제출한 사용내역 원안으로 감액 조정 없이 지급하였다.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확인(정산) 실무 가이드(예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0000-00호, 0000.00.00.]에 따른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 내역 확인(정산)
- 안전장구[안전화 한 켤레 60,000원] 확인(정산) *무기계약직 안전화 구입비 적용
- 안전관리 사용내역 확인(정산) 방법
 - 사용내역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사실 조회' 확인(정산)
 - 안전관리비로 집행(구매)한 물품 등에 대하여는 **안전장구 지급대장 작성 및 증빙사진**(근로자 착용 전신 사진 등) 확인(정산)
 - 안전관리비로 구매하는 단일물품(100만 원 이상) 등은 손울 또는 렌털로 구입 정산

조치할 사항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은

[시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여 부당하게 지급한 약 17,052천 원 상당액을 환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향후 안전관리비의 적정사용 여부를 투명하게 확인 정산할 수 있도록 연초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정산) 확인 가이드를 작성하여 안전관리비 집행(정산) 증빙자료 확인에 활용하시고 부당 사용 등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훈계) 요구

제 목 드론활용 하천 및 주변시설 점검용역 변경계약 미이행

기 관 명 (재)인천테크노파크

관 계 부 서 ~~NNNN~~본부(센터)

내 용

(재)인천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는 무인항공기(드론)을 활용한 하천 및 주변시설물 관리를 통해 자연 친화적이고 아름다운 하천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2019년 9월 (주)○○○○○○○○○○와 용역 계약을 맺고 2019년 11월에 준공하였다.

【표】 드론활용 하천 및 주변시설 점검용역 개요

용역명	과업(촬영)범위	계약금액 (천원)	계약업체	착공일	준공일
무인항공기(드론) 활용 인천광역시 하천 및 주변시설 점검	-지방하천 30개소 : 연1회(30회) -생태하천 8개소 : 분기1회 -금지행위 하천 5개소 : 월2회 -주민 밀접하천 2개소 : 월2회	61,600	(주)📖📖📖 📖📖📖	2019.9.5.	2019.11.30.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계약 사무의 처리) 제1항에는 법 제17조 제6항에 따른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테크노파크의 예산회계규정 제86조(준용)에 따르면 법인은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을 준용하고, 행정안전부 예규를 준용한다.

지방계약법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 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 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업내용의 변경 등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테크노파크는 용역 수행단계에서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성실히 감독하여야 하며, 용역공정

계획의 변경,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의 과업내용을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여야 한다.

테크노파크에서 발주한 “무인항공기(드론) 활용 인천광역시 하천 및 주변 시설 점검” 용역의 과업은 지방하천 30개소에 대한 30회 촬영과 중복되는 횡수(연1회, 분기별 1회 등)를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내 지방하천 및 국가하천 총 32개 하천에 대하여 58회 드론 촬영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는 해당 용역의 수행 도중 계약상대자를 통해 「항공안전법」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및 촬영승인 불허지역의 존재로 일부 하천에 대한 촬영이 불가함에 따라 과업내용이 완수될 수 없음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최초 계약 후 변경되는 물량증감 사유에 대한 검토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의 변경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촬영이 가능한 다른 하천들의 촬영 횡수를 늘려 전체 촬영횡수인 58회만을 만족해도 과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임의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32개 촬영대상 하천 중 16개 하천에 대한 촬영을 하지 못한 채 용역사업을 준공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은

[주의]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를 숙지하여 용역의 계약변경 및 준공검사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아래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인천테크노파크(+++++센터)

[일련번호 20] 감사관 문창숙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자동차부품 기술개발지원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미흡

기 관 명 (재)인천테크노파크

관 계 부 서 ~~NNNN~~본부(🔔🔔🔔🔔센터)

내 용

(재)인천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는 인천 자동차부품 기업의 전장/ICT융합/경량화/모듈화 부품 등 미래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기술경쟁력 향상 및 상품화 지원을 위해 [표]와 같이 자동차부품 기술개발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자동차부품 기술개발지원 사업 추진 현황

연 도	지원과제수	사 업 비(천원)			정산금액	과제수행기간
		합 계	지원금	기업부담금		
2019	6건	386,120	326,120	60,000	386,120	6개월 또는 7개월
2020	6건	420,000	360,000	60,000	420,000	8개월
2021	8건	468,200	389,000	79,200	468,200	8개월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자동차부품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관리기관”이라 함은 인천지역 소재 기업으로 사업을 주관 하여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소, 기업을 말하며, 인천광역시와 체결한 「자동차 부품기업 육성지원 사업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에 따라 테크노파크는 관리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운영지침 제5조(관리기관)에 따르면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은 신청계획의 검토·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과제의 선정평가 및 수행 결과의 평가 등 회의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사업의 실태점검,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등 사업 추진의 전반적인 관리를 수행하도록 한다.

같은 지침 제23조(사업성과의 활용보고 및 성과분석)에 따르면 주관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라 “성공”으로 판정된 경우 사업종료 후 3년간 관리기관에 성과활용 보고를 하여야 하며, 성과활용보고 방법, 성과활용보고 항목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자동차부품 기술개발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총 20개 과제에 대해 주관·참여기관에 1,075,120천원의 지원금을 지원 하면서, 운영지침 제21조에 따라 “성공”으로 판정된 20개 과제에 대하여 주관 기관의 장에게 사업종료 후 3년간 성과활용보고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2022. 2. 감사일 현재까지 성과활용보고를 받지 않았으며, 성과활용보고 방법, 성과 활용보고 항목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의 관리기관 으로서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에 미흡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은

[시정] 「자동차부품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자동차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개선 요구

제 목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제작·설치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재)인천테크노파크

관 계 부 서 NNNNN본부(☎☎☎☎센터), ☎☎☎☎본부(ㄱㄱㄱㄱ팀)

내 용

(재)인천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는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주요 설비인 수소압축패키지 제작·설치를 위하여 [표]와 같이 계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제작·설치 계약

연도	사 업 명	수량	추정가격 (백만원)	계약금액 (백만원)	착공일	준공일
2020	인천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제작 및 설치(서구, 중구)	2식	4,140	4,466	2020.5.	2021.12.

1. 협상에 의한 계약 처리 절차 미준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제9항에는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9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 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절차는 발주부서에서 계약의뢰를 하고 계약부서에서 입찰공고를 하며 이후 발주부서에서 평가위원 모집공고 및 유관기관에 평가위원 추천의뢰를 시행한다. 계약부서에서는 평가예비위원 고유번호 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에게 평가위원을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해야 하며 이는 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계약담당자가 진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테크노파크 ㉔㉔㉔㉔센터에서는 “인천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제작 및 설치”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면서 제안서평가 위원회 구성 및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평가위원 추첨절차를 계약부서가 아닌 발주부서에서 시행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선금지급 검토 미흡

지방계약법 제18조(대가의 지급) 및 지방회계법 제35조(선금급과 개산급)에 따르면 운임, 용선료, 여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금 또는 개괄 산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이나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임차료와 용선료, 운임 및 사례금, 시험·연구 또는 조사의 수임인에게 지급하는 경비, 공사·제조 또는 용역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등으로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선금지급과 관련한 유의사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 안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 안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테크노파크는 2020. 5. 11. 계약한 “인천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제작 및 설치” 물품계약 관련 (주)○○○○○○○○로 부터 선금지급 신청을 받고, 2020. 7. 3. 선금 2,679백만원을 지급하면서 선금사용계획서에서 사용일정(시기), 사용대상 경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지급 결정함으로써 당해연도 사용금액 확인 결과 366백만원(사용률 : 13.6%)만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은

[주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를 숙지하여 선금 등 대가 지급의 검토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처리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자체 업무추진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재)인천테크노파크

관 계 부 서 ☺☺☺☺본부(☺☺☺☺팀)

내 용

(재)인천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의 「차량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조(차량대장, 점검일지 및 운행일지의 비치)는 “관리부서에는 차량대장, 차량점검일지, 운행일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테크노파크는 감사일 현재 총 12대의 차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차량대장과 운행일지는 자체 그룹웨어의 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차량 관리부서에서는 지침에 따라 차량관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2019. 2. 15. 최초 임차 계약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ÆÆÆÆÆ(제네시스)을 포함하여 총 12대 차량에 대해 **차량대장**(경영정보시스템의 ‘보유차량관리’)의 기록사항인 소유주, 차고지, 구입현황 등을 누락한 채 관리하였다.

또한, 6건의 운행거리를 오기재하였고, 주유량 미기재 32건 등 총 38건에 대해 **운행일지**(경영정보시스템의 ‘차량사용신청관리’)를 미흡하게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차량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은

[주의] 차량관리지침 등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직원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